

“中企 지역산업 육성하고 경제 절반 이상 이끌도록 지원”

이영 장관, 전주·나주 등 호남지역 방문

中企 지원 올 80조 정책금융 공급
3고 복합위기 지원 22조8000억 투입
한시적 신규보증료 0.2%P↓ 계획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하루 호남지역에서 중소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지역 산업 육성 의지를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이날 전북 전주에 있는 전주첨단벤처단지를 방문해 지역 혁신 선도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식산업센터(전주혁신창업허브)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제품 제작현장 및 스마트공장 배움터 등도 둘러봤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우범기 전주시장, 김종훈 전북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전주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 8명 등이 참석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2번째)이 2일 전북 전주첨단벤처단지에서 열린 지역 중소벤처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참석한 기업인들은 ‘3고(고유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를 현장에서 실감한다면서 어려운 금융여건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의 적극적인 육성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금융위원회와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특히 3고 복합위기 지원에도 22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아

울러 고금리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를 0.2%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어서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신기술 육성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해 5년 내에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등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1000개 이상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내 수출의 40% 이상을 기여한 숨은 영웅이 바로 중소·벤처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우리 경제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엔 전남 나주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인프라 구

축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장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12월에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국비 21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설비, 선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장 등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줬다.

이 장관은 기념식이 끝난 후엔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이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같은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다”며 현장 밀착 행정을 약속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기문 4선 첫 행보는 ‘소통·내실 다지기’

새 임기 첫날 임직원들과 오찬·만찬
中企 세심하게 챙기도록 노력 강조
국무총리 주재 외부 행사도 참석

4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첫 걸음은 ‘소통 강화’와 ‘내실 다지기’였다.

취임 첫 날 외부엔 공식 일정을 알리지 않고 ‘조용한 행보’를 하면서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새 임기 첫 날인 이날 오찬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서 다시 하게 된 것 같다. 앞으로 4년 더 잘해보자”고 임원들에게 인사를 전한 후 “4년은 굵직한 것보다 중

소기업과 협동조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서 내놓은 공약에서도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962년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탄생한 본분에 맞춰 2027년 2월까지 예정된 4년의 임기 동안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가치 제고에 더 많은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공약을 통해서도 ▲대·중소기업·금융기관 등 출연 유도를 통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위한 신규자금 1000억원 조성 ▲전문인력·공동사업·협업거래·공동시설 건립 등 공동사업 활성화 ▲협동조합 전용 공동 R&D 지

원예산 확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공동판매 활성화 ▲민간시장 납품단가연동제의 공공조달시장 적용 방안 마련 ▲협동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날 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지난해 5월 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 열렸던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회’를 ‘잘한 행사’로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중소기업인 대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용산에 터를 잡으면서 처음으로 열린 행사인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참석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자리로 거듭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저녁 자리 역시 중기중앙회 노동조합 및 직원들과 만찬하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기중앙회

소통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추가로 가졌다. 임기 첫 날 진행한 두 번의 식사를 내부 임직원들과 함께 한 것이 다.

김 회장은 연임을 확정하면서 중기중앙회 본부 부서명칭을 ‘실’로 통일해 본부·실·팀 체제로 개편하는 등 ‘1단 7본부 36실, 15팀, 14지역본부, 4공제센터, 1해외사무소’로 조직을 새로 꾸렸다.

김 회장은 오찬과 만찬 사이엔 경기판교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도 중소기업계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근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면서 “업계의 ‘만형’으로서 김 회장이 향후 4년간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중심 역할을 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산업계 ‘AI 내재화’ 위해 610억 투입

산업 DX 연구개발 신규과제 모집
공급-수요 AI 솔루션 상용화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급하는 솔루션 기업과 수요 기업간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등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 산업계 AI 활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2023년 산업 디지털 전환 연구개발 신규과제 모집’을 3일 공고하고 2025년까지 총 61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각 연구개발 사업별 공고는 오는 4월 3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4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간 산업 분야는 AI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와 관심은 많았으나, 경험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간 스스로 AI를 도입하거나 기업간 협업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난 1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간 협업을 토대로 산업 생산 현장에 AI 솔루션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AI 솔루션·기업 역량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발적 디지털 투자 의지와 성과 창출이 가능한 수요기업을 선별해 전문인력 공급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밀착 지원과 규제 개선 등 민간 주도 DX생태계 조성 등도 포함된다.

이번에 공고하는 연구개발 신규과제는 이같은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총 3가지 방식의 신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자율주행 로봇, 보행로 통행 가능해진다

산업부, 규제혁신전략회의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과 함께 보행로를 통행하고, 이동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택배 로봇이나 불을 끄는 소찰로봇 등이 등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력 부족과 산업재해 예방, 미래 신성장산업 등 1석 3조 효과를 가진 핵

심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로봇시장은 현재 282억달러에서 2030년 831억달러로 연 13% 성장이 전망되며, 물류·경비·원격점검·음식제조 등 신 비즈니스 분야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해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51개 개선과제 중 39개(76%)는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연내 개정기로

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에 해당해 보도통행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해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한다.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연내 택배나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고, 2024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도 2024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